"5+2 광역 경제권 반드시 보완돼야"

박광태 시장·박준영 지사, 李 대통령에 건의

"낙후된 호남 경제 어려움 가중 우려"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정부에서 추진중인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또다시 촉구했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 지사 회의에서 "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호남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만큼 보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해서는 지역 언론계와 시민단체, 정치권이 전부 불만"이라며 "전체적으로 볼 때 호남이 어려운데 또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또 "전북의 새만금 개발사업을 하나로 독립시켜 '5+3'으로 보완, 광주와 전남을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시·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라며 "역대 정권이 하지 못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펴달라"고 덧붙였다.

박준영 지사는 "광역경제권은 전남만 해도 초광역경제권 구상이나 남해안을 아우르는 선(sun)벨트 구상을 통해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지만, '5+2 구상'만으로는 광주는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보완대책이 필요하며 이는 지방의 한결같은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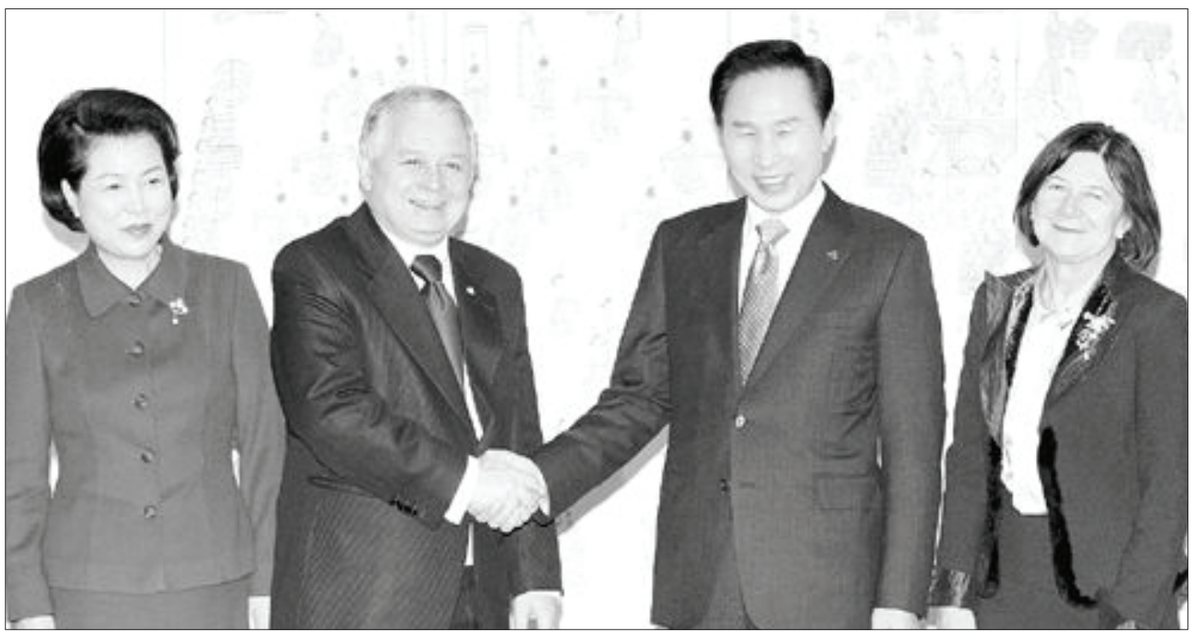
박 지사는 또 "J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외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관광수지 개선 등 지역과 국가발전에 필요한 각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정부에서는 1천만 평만 개발하라고 하는데, 당초 계획대로 3천만 평이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시·도지사는 이와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호남고속철의 무안공항 경유를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J프로젝트나 호남고속철 건설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국가 정책사업은 사업타당성 분석보다는 선 투자가 이뤄진 뒤 나중에 효과를 봐야한다"고 설명하고 "(이같은 차원에서) J프로젝트나 호남고속철 조기완공은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지만 지역이 힘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지역이 모두 잘돼야 한다. 경제위기를 정부와 시·도지사들이 협력해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폴란드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레흐 카친스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설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후속조치 서둘러라

이명박 대통령이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엊그제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회의에서 호남고속철도를 조기 완공해달라는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건의를 받고 "완공 시기를 앞당기려 한다"고 밝혔다. 짧은 언급이지만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구체성은 부족하다. 당초 오는 2017년으로 예정된 완공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 것인지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호남고속철도를 2012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은 광주·전남의 최대 현안이다. 지역사회는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에 많은 기대를 걸었으나 진척은 거의 없다. 국토해양부가 내년 9월 착공해 오송~광주 구간은 2015년, 광주~목포 구간은 2017년 완공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전부다. 2012년 완공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조기 완공 재천명이 국토해양부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2012년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2012년에 근접해야 한다. 고작 1~2년 앞당기는 등 시늉에 그쳐서는 호남 주민을 다시 한번 우롱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대통령의 발언을 구체화해야 한다. 경부고속철도가 2010년 개통되는 점을 감안하면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은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이 의지를 재천명한 만큼 건설일정 조정과 예산확보 방안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호남고속철도를 이 대통령의 임기 내에 완공할 것을 주문한다.

국고보조금을 '눈 먼 돈'처럼 쓰는 지자체

전남도내 자치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을 낭비하거나 썩히고 있다. 마구잡이로 국비를 받아와서는 사업 추진절차를 밟지 않거나, 자치단체 몫의 예산을 부담하지 못해 삽도 뜨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국고보조금 낭비사례를 보면 뭔가 한참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근 무안군에 공원묘지를 조성하겠다고 나선 목포시가 대표적인 경우다. 목포시는 주민동의, 투자심사도 없이 국비 22억원을 끌어오는 '능력'을 발휘했으나, 4년여 동안 끌다가 결국 포기했다.

곡성군은 섬진강에 소수력발전소를 건립하겠다고 45억원의 국비를 받았다가 사업을 취소해야 할 형편이다. 사전환경성 검토나 하천점용허가 등 절차를 밟지 않은데다, 주민 반발이 심하고 부담해야 할 군비 46억원도 마련할 방법이 없다. 진도군의 실버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도 비슷한 경우다.

문제는 이런 '받고 보자' 식 국비 확보가 지역주민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점이다. 민선 단체장들이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경쟁하듯 국비를 끌어오지만, 정작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사업능력 부족으로 잇따라 반납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오히려 '이래서 지방자치제를 하면 안 된다'는 불신감만 증폭시키고 있다. 건물만 요란하게 지어놓고 운영비 부족에 허덕이는 자치단체도 상당수다.

단체장들의 무분별한 국비확보 경쟁은 자제돼야 한다. 하지만, 한 해 국비 의존율이 전남 90%, 광주 50%나 되는 상황에선 서울행 '예산 구걸'을 비난할 수만은 없다. 정부가 지역소득세·지역소비세를 신설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겨울 테마파크' 영광에 들어선다

영광에 겨울을 테마로 한 대규모 놀이시설이 들어선다. 또 전통선박 형태의 관광유람선 건조와 레저용 선박 제조 사업이 추진된다.

전남도는 5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김병채 ㈜한려수도 대표이사, 김정희 ㈜제이와이레져보트 대표이사, 우종설 ㈜한국하이네트 대표이사, 임성묵 ㈜아원 이사, 김동주 ㈜다해인터내셔날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한국하이네트와 ㈜아원, ㈜다해인터내셔날 등 3개사는 영광 백수읍 일원에 1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총 14km 길이의 모노레일과 아이스캐슬, 이글루 빌리지 등 겨울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 '윈터월드' 조성사업에 나선다.

'윈터월드'는 ㈜한국하이네트와 전자파 장애방지 부품생산 전문기업 ㈜아원, 테마파크 기획 전문기업인 ㈜다해인터내셔날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채희종기자 chae@

광주·전남 교직원 93명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광주시와 전남도 교육청에서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교직원은 93명으로 집계됐다.

5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직불금 부당 수령자는 광주가 20명, 전남이 73명이며 금액으로는 각각 953만5천원과 1천725만원이다.

직급별로 광주는 교장 3명, 교감 2명 등 교원이 15명, 일반직(2명)과 기능직(3명) 등 직원이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교장 6명을 포함해 교원이 53명, 일반직(8명), 기능직 12명 등 직원이 20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기업 등 각급 기관의 실태조사에서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직자가 총 2천499명으로 파악됐다며 해당자 명단을 국회 특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서쪽 배후단지 212만㎡ 추가 … 부가가치·고용 창출 기대

물동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전남 광양항에 자유무역지역이 확대 지정돼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증대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광양항 서쪽 배후단지(212만 5천㎡)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기존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광양항 동쪽 배후단지(675만 4천㎡)에 24개 물류기업이 입주한 상태인데 이번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서쪽 배후단지 개발이 오는 2011년 완료되면 2조 2천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와 5천여 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투자유치와 무역진흥을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은 입주기업에 관세, 취득세, 등록세 면제 등 세제혜택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 임대료와 유연한 노동법 적용의 혜택이 부여된다.

자유무역지역에는 수출을 주로 하는 조립·가공업체와 물류기업이 입주할 수 있으며 서쪽 배후단지는 2011년 초부터 입주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kwangju.co.kr

물량 재배치·혼류 생산으로 불황 타개

기아차 노사 합의

기아차 노사가 자동차 수요 급감 등 업계의 현안을 타개하기 위해 물량 재배치나 혼류생산 등 유연한 생산체제를 갖추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사 합의에 근거한 탄력적인 생산라인 운영체제가 현대차를 포함한 자동차 업계에 확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아차는 4일 경기도 광명 소하리 공장에서 노조를 상대로 경영현황 설명회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변화 방안과 실천 의지를 담은 노사합의문을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기아차 노사는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체질개혁 노력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기아차 노사합의문'은 ▲자동차산업 위기 극복 ▲평생일터 실현 ▲투명한 노사관계 구축 ▲성공적 신차 확보 및 안정적 라인 운영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노사는 특히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물량 재배치와 혼류생산 등으로 생산라인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유연한 생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판매가 줄고 있는 대형차인 카니발 공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요가 유지되고 있는 소형차 프라이드를 이달부터 함께 생산하기로 했으며 주문이 밀려 있는 준중형 세단 포르테의 혼류생산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기아차는 전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순천만 갯벌' 여수박람회 지원시설 지정

순천만 갯벌이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로 지정된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김병일 사무총장은 5일 여수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순천만 갯벌을 지원시설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순천만 갯벌과 여수 신항은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란 여수세계박람회 주제와 맞아떨어진다"며 "여수 신항은 박람회 시설물인 'BIG-O'를 통해 살려내고, 순천만 갯벌은 지원시설로 지정함으로써 박람회 현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2010 상하이(上海) 박람회 부지(5.28㎢) 규모가 여수박람회 부지(0.25㎢)보다 21배 크지만 상하이 박람회 부지는 가공된 것이고 여수 박람회 부지는 리얼한(현실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또 "박람회 부지에 상징조형물이 필요하다는 지역여론을 받아들여 상징조형물을 세우기로 했다"며 "이달 내로 여수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성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박람회 부지 남쪽 사일로(Silo-탑 모양의 건축물)는 없애는 걸로 했고, 북쪽 사일로는 여수항만 역사와 환경엑스포 주제를 구현하도록 활용하기로 했다"며 "해양부유시설로 지을 주제관이 여수박람회 랜드마크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검찰, 노건평씨 횡령·탈세 추가 혐의 추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되도록 도와주고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5일 오후 다시 대검 특별조사실로 불러내 횡령, 탈세 등 추가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4년 초 정원토건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대주주였던 리얼아이디테크놀러지사(비상장사)의 주식 10억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정원토건은 노씨가 100% 지분을 갖고 직접 경영하는 회사"라고 설명했다.

태광실업 계열사인 정산개발은 2003년 12월 정산골프장 진입로 공사를 정원토건에 맡기고 공사대금 32억여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노씨가 빼돌린 회삿돈이 정산개발로부터 받은 대금이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리얼아이디테크놀러지의 주식을 사라는 박 회장의 '귀띔'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 주식을 구입한 10억원이 전부 빼돌린 회삿돈인지 등을 추적 중이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더 이상 무슨말을 할꼬… ? !

농협 임원·집행간부 24명 사의 표명

농협중앙회는 5일 비상경영위원회 직후 인적 쇄신의 일환으로 이정복 전무, 김경진 경제대표, 남성우 축산대표, 김태영 신용대표, 서인석 조합감사위원장 등 임명직 임원 5명이 중앙회장에게 사의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들 임원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경제대표만 작년 7월 선임돼 임기의 반을 넘겼을 뿐 나머지 4명은 모두 지난 7월 취임 후 근무 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다.

중앙회 집행간부 19명 역시 전무이사와 해당 사업부문 대표이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농협 관계자는 "사의 수용 여부는 전적으로 회장과 전무(또는 대표)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사표가 수리될 경우 농협중앙회장은 현행 농협법과 정관에 따라 새 임원 후보를 추천하고, 일선 조합장 대표 회의인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된다.

농협은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뒤 6시간이 넘는 긴급 대책회의를 거쳐 ▲ 지주회사제 도입을 통한 지배구조 혁신 ▲ 농산물 산지점유율 60%, 소비지 점유율 15% 달성 등의 중장기적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했고 이날 역시 비상경영위원회를 소집,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구체적 개혁 방안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들은 "구체적 개혁 방안이 결정되려면 앞으로도 여러 차례 더 논의를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연합뉴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AX	02-773-9335〉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